내년〈10월9일~11월5일〉 열릴 '광주세계광엑스포' 주요 내용

전시관 '빛 체험', 도심선 '빛 축제'

내년 10월 9일부터 11월 5일까지 광주에서 열리는 '2009 광주세계광(光)엑스포'는 '미래를 켜는 빛(가칭)'을 주제로 과학·기술·산업·예술 분야의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광주시와 (재)광주세계광엑스포(사무총장 홍진태)가 14일 발표한 실행계획을 토대로 1년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광주세계광엑스포의 주요 행사 내용을 살펴본다.

국내외 1천개 이상 기업 참여 전시·컨퍼런스

열기구 체험·멀티미디어쇼 등 다양한 이벤트

◇주제전시=6만8천평 규모의 상무시민공원 주행사장에서 태초의 빛, 빛의 과학, 광기술, 광산업, 빛의 문화예술 등 빛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과 교육, 인식의 장을 제공한다.

주제전시관은 우주와 빛의 기원, 에너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서 빛의 가능성 등을 환상적인 3차원(3D) 입체 영상으로 관람할 수 있는 250석 규모의 주제영상관, 빛의 과학적 원리를 체험하는 빛과학체험관, 우주를 이해하고 우주 속 광기술을 발견하는 특별전시관으로 구성된다.

부제전시관은 광기술과 광산업을 접할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광기술이 여는 미래 생활모습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빛도시 생활관', 광주 광산업의 태동부터 미래 모습까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빛산업 기술관', 세계 30개국, 55개 도시, 20여개 국제조명기업들의 연합체인 국제 빛의 도시연합(LUCI) 회원들이 참여하는 '세계빛도시참여관'으로 꾸며진다.

참여시민관은 60여개의 컨테이너형 라이트박스 공간을 광주시내 학생, 동아리, 단체, 예술작가들에게 제공, 시민들이 직접 빛 관련 전시콘텐츠를 꾸밀 수 있도록 하는 '소통의 엑스포'를 위한 특별한 구상이다.

특히 특별전시관에는 광주 출신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씨가 우주에서 했던 실험 도구와 결과 등을 전시해 우주과학 분야의 근간이 되는 광기술을 자연스럽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할 방침이다. 솔라시티로서 광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태양광에너지관도 설치된다.

◇산업전시·컨퍼런스=해마다 열리던 광산업전시회의 규모를 확대시킨 행사로 28일 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LED(발광다이오드) 엑스포, 라이팅 페어 등 4개의 전시회와 국제광기술컨퍼런스, 국제광산업협의회 연차총회, 한국물리학회 컨퍼런스 등 광 관련 국내외 콘퍼런스가 개최된다. 시는 전시기간 중 1천여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빛의 축제=광주시내 주요 도심지역에서 빛의 거리 작품전시와 야간 빛의 축제 등 진행하며 빛의 놀이와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대규모 시민문화축제로 기획된다. '국제 빛 디자인 공모전', 상무시민공원에 조성되는 '라이트 파크(Light Park)', 별똥쇼 등 다양한 빛의 향연이 펼쳐진다.

◇부대행사 및 이벤트=관람객들에게 낮에는 퍼레이드쇼, 열기구 체험, 도전 골든벨 등의 이벤트를, 밤에는 초대형 야간 멀티미디어쇼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빛고을 광주라는 도시 브랜드와 광산업의 경쟁력을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시민들이 빛을 통해 미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09 광주세계광엑스포 주행사장 조감도.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용전 들노래 광주시 북구 '용전 들노래 보존회' 소속 회원 50명이 북구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 인근 들판에서 백중(음력 7월 15일)을 앞두고 광주지역 대표적 농요인 '용전 들노래'를 부르고 있다. '용전 들노래'는 농군들의 피로를 덜고 노동력을 높이기 위해 모판 밟기, 모찌기, 모심기, 논매기, 장원질 등의 5개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흥겹고 경쾌한 장단이 특징이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산구청 재활용품 처리업체 선정

시설 미달 업체 수의계약 말썽

재활용품 무상 공급… 月 수백만원 수익도 포기

광주시 광산구청이 재활용품 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공개 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다른 자치단체는 재활용품을 팔아 얻는 수익금을 구 재정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광산구는 이를 무상으로 업체에 공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특혜 시비까지 일고 있다.

14일 광산구청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11월께 광산구 신창동 M환경과 2년간 '광산구 재활용품 선별위탁처리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자동화 선별 센터시설을 갖춘 M환경이 종이류·병류·플라스틱류·스티로폼류 등을 선별처리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계약 당시 M환경은 광산구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M환경은 재활용 분류에 앞서 쓰레기 등을 보호해 두는 실내 시설(창고)이 부족해 실외에 방치하는 바람에 침출수는 물론 악취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민원이 제기되자 광산구는 이 업체에 관련 시설을 갖추도록 지시해 비 가림 시설을 증축했지만, 이마저도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M환경 부지는 잡종지여서 총 면적의 20% 이상에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또 재활용품 선별 위탁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광산구는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인터넷 등을 통한 정식 업체 모집 공고 절차를 밟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서구를 제외한 동구·남구·북구 등 3개 구청은 재활용품 수거업체 모집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지원한 2~3개 업체 중에 가장 높은 재활용품 매입 단가를 쓴 업체를 선정해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구청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북구청의 경우 한 달에 1천만 원(80t), 남구청 400만 원(40t), 동구청 400만 원(30t) 등이다.

하지만, 광산구는 M업체와 재활용품을 무상으로 수거하도록 계약해 한 달에 400만~1천만원 가량의 수입을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광산구 청소행정팀 관계자는 "계약 당시 광산구내 쓰레기를 처리할 만한 시설을 갖춘 업체는 한 곳뿐이어서 수의계약을 했다"며 "광산구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가 직접 인부와 시설을 동원해야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필상기자 kps@

청소년 유해업소 무더기 적발

주류 판매·도우미 고용 노래방 등 50곳

市·시민단체 등 합동단속

광주시내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해온 청소년 유해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열흘간 자치구와 교육청, 경찰,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장 등 1천236곳에 대해 단속을 벌여 청소년보호법 등을 위반한 50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청소년 주류판매 3곳, 청소년 영업시간외 출입 1곳, 청소년 담배판매 1곳, 노래연습장에 도우미 고용 4곳, 노래방 주류판매·보관·반입묵인 등 18곳, 기타 개별 법령 위반 23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 서구 양동 S유흥주점은 성매매 알선으로, 서구 치평동 J일반음식점은 영상가요반주기 설치로 영업정지와 시설개수 명령 등을 받았다.

또 동구 B호프집과 지산동 D음식점, 북구 O호프집 등은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로, 남구 W피시방 등은 밤 10시 이후 청소년을 출입시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노래연습장 22곳은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영업장 내 주류 판매·보관 등으로 적발돼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쇠고기 원산지 표시 교육

광주시 음식점 2천여곳 대상…홍보 활동도

광주시와 각 구청은 쇠고기와 쌀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 14일부터 교육과 홍보활동에 돌입했다.

시는 14일부터 5개 구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또 15일부터는 광주지역 음식점 영업주 2천여명을 대상으로 5차례에 걸쳐 원산지 표시 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15일 남구를 시작으로 16일 서구와 북구, 17일에는 동구와 광산구에서 이뤄진다.

시는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작한 홍보전단 6만부를 음식점에 배포해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로 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그동안 100㎡ 이상 중대형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만 적용되던 것을 지난 8일부터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적용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택시 조합원 LPG값 폭등 대책 촉구

광주지역 택시노동자 조합원들은 14일 "LPG값 폭등에 따라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정부와 시에 LPG값 인하 등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택시노동자 조합원 50여명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PG 유가 연동 보조금 책정 및 유가 연동제를 즉각 실시하고 택시구조조정에 따른 재정지원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법제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LPG원가 즉각 공개 ▲부가가치세 100%감면 ▲제2순환도로 통행료 감면 ▲버스전용차로 개방 등을 촉구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